

메드베데프시대 러일관계

동북아의 안보질서의 불안정 속에서 러시아는 대일본 정책에 있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분쟁섬(에토로후, 구나시리, 시코단, 하보마이)의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즉 분쟁섬에 대해 러시아는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영토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인 경우, 러시아는 분쟁섬을 포함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현대화를 위해 지역발전을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보적인 경우, 러시아는 군사거점지역으로 분쟁섬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여 안보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영토문제의 경우, 러시아는 1945년 일본패전이후 65년이상 관리해온 분쟁 4도에 대해 자신들의 영토임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2010년 11월 러-일간 분쟁섬인 구나시리섬을 메드베데프가 방문한 이후 대일본관계 변화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첫째, 메드베데프의 분쟁섬 방문전 일련의 사건들과 구나시리 섬 방문의 목적은 무엇인지. 둘째, 분쟁섬들에 대한 경제 및 안보적인 측면에서 실효지배 강화를 위해 러시아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셋째, 러시아의 대일 영토문제에 대한 정책에서 변화들이 있는지. 넷째, 메드베데프 집권하에 양국관계 개선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향후 양국관계의 협력발전은 왜 필요한지, 영토문제의 접근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구나시리방문(2010.11.01)

기상악화로 9월말 방문이 취소된 이후 11월 1일 소련시대를 포함해 러시아의 최고지도자로서 양국의 분쟁지역인 남쿠릴섬을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구나시리섬을 방문한 메드베데프는 “이 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자금을 투입한다”고 언급하여 분쟁 4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려는 자세를 나타냈다.

당시 일본 마에하라 세이지(Maehara Seiji) 외상은 만약 메드베데프의 분쟁섬 방문이 이뤄진다면, 양국관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러시아측에 경고했다. 일본의 방문 자체 요청을 무시하고 분쟁섬을 방문한 것은 러시아의 “실효지배”를 국내외에 분명하게 알리는 목적이 있었고, 분쟁섬에 거주하는 러시아주민들에게 “이 섬들이 러시아 영토이다”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메드베데프의 구나시리섬 방문으로 영토문제에 대한 양국간 오래된 분쟁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메드베데프의 분쟁섬 방문에 대해 간 나오토(Kan Naoto) 수상이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 발언은 즉흥적으로 북방영토의 날(2월 7일) 행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본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른 정식 발언이었기에 러시아 측으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았던 것이다.

1) 구나시리 방문전의 사건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분쟁섬 방문을 앞두고 양국사이에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첫째, 2010년 6월 29일부터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동방 2010”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쿠릴섬 에토로후를 훈련장으로 사용했다. 이 훈련에 대해 당시 오카다 가쓰야(Okada Katsuya) 일본외상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라면서 “우리로서는 (러시아의 훈련을) 인정할 수 없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러시아 측을 비난했다. 이 군사훈련은 일본의 북방영토 반환요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변화, 즉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제2차세계대전 종전의 날” 제정(2010년 7월)은 크렘린의 대일 강경론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2010년 7월 7일 러시아 하원은 일본이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의 항복문서에 서명한 9월 2일을 대일 전승기념일로 제정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러한 제정을 하게 된 배경은 2010년 4월 시행된 북방영토를 “우리국가의 고유 영토”로 명기된 일본의 “개정 북방영토문제 해결촉진 특별법”에 대한 대항조치로 볼 수 있다.

셋째, 일본 정부는 분쟁섬에서 일본기업들의 활동이나 비자취득후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식료품가공기계회사 사원 2명이 러시아의 입국비자를 받고 에토로후섬을 방문하여 당사의 기계를 정비 한 것에 대해 당시 센고쿠 요시토(Sengoku Yoshito) 관방장관은 해당기업에 엄중항의하고, 사업관여를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여행업계를 비롯한 사업자 관계기관에도 분쟁섬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러시아가 불법점령하고 있는 분쟁 4도에서의 경제활동이나 비자취득후 방문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하게 했다. 또한 마에하라 외상 등의 ‘불법점거’ 발언 등 민주당 정권이 영토문제 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러시아측을 자극하는 일련의 행태들이 메드베데프로 하여금 강경대응으로 나오게 했다.

2) 구나시리의 방문 목적

메드베데프의 구나시리 방문 목적은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러시아정부가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계획 2007-2015”을 위해 책정한 연방예산으로 정비한 발전소, 항만, 공항 등 인프라정비의 진척상황을 시찰하는데 있다. 이 사업은 쿠릴열도 가운데 양국간 분쟁이 되고 있는 남쿠릴섬의 탈 일본화이다.

둘째, 남쿠릴섬은 러시아 영토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있다. 이번 방문은 분쟁 4도의 러시아에 의해 실효지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분쟁 4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영토반환 요구를 강하게 억제하는데 있다.

셋째, 국가최고지도자가 분쟁섬 구나시리섬을 방문 한 것은 하보마이와 시코단 2도를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토대로 일본에 인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구나시리와 에토로후 2도는 절대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일 수 있다. 이처럼 러시아대통령의 분쟁섬 방문은 일본의 4도 반환 주장에 동요를 가져오게 하여 기본노선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목적도 있다.

넷째, 2012년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나 인프라 정비 등에서 일본과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러시아는 대아시아외교의 중요한 고비가 될 2012년을 앞두고 지금 이 시기에 분쟁 4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측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도 있다.

2. 분쟁섬 실효지배 강화를 위한 경제적 조치

러-일 분쟁중인 남쿠릴섬 지역은 풍부한 어업자원의 보고이면서 상당한 광물자원(티타늄, 황, 피상황화광상 등)이 매장되어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에게 가치가 있다.

극동지역의 개발촉진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는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지금 영토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양국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은 “일본과 영토교섭을 추진하는데 있어 영토협상보다 당면 선결가제인 일본기업의 대러 진출이나 투자 등 경제관계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러시아정부의 방침”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그러나 2011년 3월 15일 일본 NHK와 인터뷰에서 라브로프는 분쟁섬에서 경제활동 하는데 “일본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로 억제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처럼 일본이 영토문제 미해결로 인해 적극적인 대러 경제협력을 하지 않은 분쟁지역에 대해, 러시아정부는 독자적인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이 지역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구나시리섬 방문에서도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실효지배하고 있는 분쟁 4도에 대해 인프라정비를 추진할 의향을 비중있게 강조했던 것이다.

2011년 1월 31일 구나시리를 방문한 바사르긴 지역개발장관은 분쟁 4도를 포함한 쿠릴 열도를 대상으로 한 2025년까지 새로운 개발안을 4월말까지 마련하여 정부의 극동발전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개발안의 책정은 분쟁 4도의 자력개발을 가속화하여 러시아의 실효지배를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12월 20일 사할린주제 5개국 대표들과 회담에서 분쟁섬을 관할하는 사할린 주지사 알렉산드르 호로샤빈(Alexander Khoroshavin)도 분쟁섬에서 양국 공동경제 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호로샤빈 주시자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계와 (남쿠릴섬을 포함) 쿠릴열도에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기술을 활용한 항만, 주택 건설이나 수산물가공관련 합작회사설립 등 양국이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이 있다”면서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반응을 보면, 일본정부는 러시아의 관할권을 인정하게 되는 북방영토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일본기업에 자속하도록 요청했다. 마에하라 외상은 “북방영토에 2국간 경제

협력을 고려할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러시아의 경제협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나타냈다.

일본은 러시아가 불법점령하고 있는 분쟁 4도에 대한 경제협력을 반대하고 있지만,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자원개발이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협력에 관심을 보인 것은 양국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로 보인다. 러시아도 중장기적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본과 협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움직임은 볼 때, 러시아가 일본과 영토문제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섬 개발을 진척시켜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전략을 한층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분쟁섬 구나시리 등에 중국이나 한국기업들과 합작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실효지배의 강화를 보여 줌으로써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한 기본노선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분쟁섬 실효지배 강화를 위한 군사적인 조치

러시아가 분쟁 4도 반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4도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있다. 러시아군은 “이들 섬은 러시아 극동의 방위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만약 남쿠릴섬이 일본에 반환된다면, 러시아는 상당한 군사적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영토반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러시아군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의 군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분쟁섬 에토로후와 구나시리 2도에 군현대화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2010년 12월 20-21일 드미트리 불가코프(Dmitri Bulgakov)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국방부의 대표단이 분쟁섬 에토로후와 구나시리를 방문했다. 이들 섬에 주둔하고 있는 제18기계총포병사단의 시찰이 목적이었다.

러시아 군부는 이 사단을 최신병기로 무장한 기동성이 높은 사단으로 재편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에토로후섬에 있는 공항 확장공사도 시행하여, 대형군용기나 공격용 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들 섬들에 최신통신 전자대응전의 장비와 레이더 기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2011년 5월 11일 러시아 국방부는 분쟁섬에 주둔부대의 증강계획안을 조만간 국가지도부에 제출할 방침임을 밝혔다. 구나시리와 에토로후 2도에 새로운 2개소의 군사거점을 구축하고, 이동식 대함미사일 시스템 등 최신예 무기를 배치하는 등 러시아는 분쟁섬의 군사요새화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소련붕괴이후 약체화된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강화 뿐만 아니라, 영토문제의 협상과정에서도 상당히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분쟁섬에서 군병력의 재정비와 주둔 부대의 장비 현대화 추진은 분쟁 4도의 군사전략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주권하에 있는 남쿠릴 4도를 반환 할 의사가 없다는 인상을 줄 목적도 있다. 일본정부는 국가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

국과 연대하여 이 지역에서의 방위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일본은 러시아가 불법점령하고 있는 이들 섬에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분쟁섬들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려는 경제 및 군사적인 조치들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 극동을 위한 경제와 안보 전략에 있어 분쟁 4도가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4. 영토문제에 대한 입장변화

2000년대 들어와 러시아의 대일 전략은 분쟁 4도를 양국 영토협상의 대상지역으로 하지 않고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서 양국이 합의한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와 시코단 2도 인도를 토대로 양국 영토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민당정권이나 현 민주당정권도 4도 일괄반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러시아도 2도 인도로 영토분쟁 해결이란 기본 입장을 유지하여 양국간 영토협상은 교착상태에 놓여있었다.

2008년 집권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영토문제를 둘러싼 주요 발언을 보면, 러시아는 영토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8년 7월 집권 후 첫 러-일 정상회담에서 메드베데프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화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단 그는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단기간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교섭의 장기화를 시사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러시아는 중국 및 노르웨이와 분쟁지역을 50대50으로 해결했었다. 그러나 러-일간 분쟁섬들에 대해서 러시아는 2도 인도로 양국간 영토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일본측에서도 현실적인 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한 일부 정치인들이 정부의 기본입장인 4도 일괄반환 요구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입장변화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민당의 마지막 수상이었던 아소수상도 외상시절인 2006년 12월 중의원 외교위원회 모임에서 에토로후의 약 25%와 나머지 3도를 합하면 면적으로 50:50 비율이 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수상시절인 2009년 4월 당시 아소수상의 외교자문을 맡은 전 외무성 차관 야치 쇼타로(Yachi Shotaro)도 “3.5도 반환론”을 제기하여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Hatoyama Yukio) 전수상도 집권시 4도 귀속확인 전제로 먼저 2도이상 영토반환을 제안하기로 구상했다고 한다. 2010년 6월 22일 하토야마는 *Hokkaido Shimibun*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방영토 교섭에 있어서 9월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고려했다고 한다. 하토야마는 4도의 일본귀속을 확정한 이후에 “일소공동선언을 토대로 2도 + 알파를 주장하려 했다”고 언급하여 2도이상의 선행반환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했음을 밝혔다. 그는 “4도 반환 입장이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유연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하토야마 전수상의 조기 사임으로 영토해결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 실현되지 못했다.

러시아 세르게이 나루쉬킨(Sergei Naryshkin) 대통령부장관은 2011년 2월 12일 모스크

바를 방문한 마에하라외상을 만나 회담했을 때, 그는 북방영토문제에 있어 일본이 기본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영토교섭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한 그는 “일본이 역사를 일방적으로 결론내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알렉산드르 파노프(Alexander Panov) 전주일대사도 일본이 1855년 에토로후와 우루프섬 사이를 양국간 첫 국경으로 정한 시모다조약(일러통상조약) 등을 근거로 4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 남쿠릴(북방영토)섬은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며 그 이전의 실효한 조약과 결부시키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논거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서 본 일련의 조치들이나 러시아측의 영토문제에 대한 발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현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일 영토문제를 다시 보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푸틴시대 제시한 2도 인도 제안은 더 이상 러시아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고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2011년 6월 5일 실효지배를 고정화하려는 자세를 이바노프 부수상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언급했다. 그는 “러-일의 통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본의 기업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서 현재에도 양국 협력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나타내면서,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있어서 평화조약 체결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의 지도부에서 평화조약의 불필요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여 러-일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방침에 상반되는 발언이다. 따라서 이바노프 부수상의 발언은 분쟁4도의 실효지배를 공고화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분쟁섬 방문이후 일본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기본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러-일관계에 대해 마에하라 외상은 “우리는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만, “먼저 영토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일본은 대러 정책에 있어 영토문제 우선으로 인해 다른 모든 문제를 하위에 두고 있다.

5. 양국관계 개선의 어려운 점

2008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양국관계 개선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첫째, 현재 일본 민주당정권의 불안정은 대러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메드베데프 정권하에 일본의 집권당은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의 시기로 정치안정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치나 외교적 경험이 부족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대응이 틀에 박힌 과거의 기본입장을 준수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말만 남용하고 있는 것도 양국관계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마에하라 외상도 영토문제에 있어서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영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둘째, 분쟁섬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관계악화를 해결하려면, 일본은 러시아와 돈독한 정치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마에하라 외상은 “러시아와 돈독한 정치관계 없이 영토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일본은 영토문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안정된 정치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메드베데프 정권이 들어와 양국 지도자들간의 정상회담을 아직 정례화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최근들어 양국은 외상간 회담을 정

례화 하는데 그치고 있다.

셋째, 전반적 양국 신뢰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현재 양국은 상호 정치적 불신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런 불신관계의 극복은 우선 지도자들간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2010년 12월 시행한 러시아의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분쟁섬 반환에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간의 교류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양국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양국 교착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양국간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지도부는 경제협력이 영토분쟁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개발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의 선진기술과 자본은 필요한 것이다. 일본 보수진영과 가까운 *Yomiuri Shimbun*도 간 수상이 경제협력과 기술이전을 토대로 러시아와 영토분쟁에 돌파구를 열기위해 더 진지하게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국내여론을 의식하여 민주당 간 정권은 경제 분야에서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1년 1월 24일 간 수상은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우리는 천연자원 개발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도 극동지역개발에 적극 참여를 일본으로부터 기대 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문제로 인해 대일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6. 향후 양국 발전을 위한 과제 해결 방안

러-일은 영토문제를 제외하고 다방면에 양국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자국경제의 현대화와 중국의 위협증대가 최대 관심사이다. 왜냐하면, 강국이 되기 위해서 러시아가 지금 필요한 것은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러시아는 구미(歐美)로부터 협력을 얻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일본의 자금, 과학기술, 경영체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러시아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군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거대세력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 러-일간 연대를 심화시키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처럼 러-일관계의 발전은 러시아의 장기적인 외교전략에 있으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발전을 낙관하고 있다. 모스크바 외교부 외교아카데미의 국제관계 부학장을 맡고 있는 예브게니 바자노프(Yevgeny Bazhanov) 교수도 전반적인 양국관계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바자노프에 의하면, 최근 러-일간 논쟁은 양국관계를 해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활성화되고 있는 경제관계와 외교문제들에 비슷한 정치적 입장들 때문에 양국관계는 어느 때 보다 좋다고 한다. 하지만, 양국간 현안인 영토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격동하는 동북아 주변 국제질서를 고려하여, 실리를 바탕으로 대

러 협력관계의 구축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도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다. 일본은 중국의 확대되는 경제력이나 군사력 증강을 장기적으로 러시아보다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일본은 러시아와 안보대화 및 방위협력을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국익차원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자원개발이나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발전에 협력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북방 영토에서 러시아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구나시리 방문이후 분쟁섬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살펴보았을 때, 2004년 당시 푸틴대통령이 제안했던 1956년 일소평화조약을 토대로 영토문제 해결에서 분쟁섬들에 대한 실효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입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2도 인도로 양국 영토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분쟁 4도의 실효지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다.

따라서 일본은 대러 노선에 있어 양국간 좋은 이웃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 전략을 내놓지 않으면, 영토문제의 해결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양국 현안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1945년 9월초 점령한 분쟁섬들을 65년간 러시아영토로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은 이제 인정하고, “4도 반환”을 지금까지 교섭의 기본입장에서 벗어나 상호 받아 들일 수 있는 새로운 영토교섭의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비록 일본 보수진영이 기본 노선의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전 자민당 정권시절 모리 및 아소 전수상이나 현 민주당정권의 하토야마전수상 등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제안했던 2도 + 알파로 영토문제를 푸는데 중점을 두고 대러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일본은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대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는 대러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선 러시아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기본노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과거를 극복하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려면, 새로운 차원의 정치대화, 경제협력 등 다면적인 협력을 적극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이 원하는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분쟁 4도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고, 평화조약 체결 후 양국간 진정한 협력 동반자관계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